

투데이 칼럼

북한 사이버 안보 위협

갈수록 고도화되고 교묘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관심이 크다. 한지호, 진천지, 위하오란, 그리고 중화는 미국 정부가 추적중인 북한 IT 기술자 3명과 이들의 관리자가 사용한 가명이다.

3명의 북한 기술자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인 신분을 도용해 300여 개의 IT 기업에 위장 취업했다. 채택이나 원격 근무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미국인 채프먼을 통해 신분증을 넘겨받거나 취업 사이트 제정을 구매해 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프먼은 90대가 넘는 컴퓨터를 활용해 북한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원격 접속을 도왔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680만 달러, 우리 돈 약 92억 원에 달한다.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틀처럼 고도로 숙련된 북한 IT 기술자들이 세계 각지에 체류하며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 쪽에는 북한 노동자들 그리고 북한 소프트웨어 하청 회사가 많다.

북한은 200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IT 영재교육을 시행해 왔다. 금성학원, 금성 제1중학교 등의 명문 학교에서는 컴퓨터 수재반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정복규
논설위원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 이과대학에 진학해 주요 IT 인력으로 양성된다. 양성된 IT 인재들은 북한 내부가 아닌 해외에서 더 많이 활동한다. 북한에는 IT 환경이라든가 IT 기술을 질실하 요구하는 생태계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력은 중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 많이 나간다.

단순하게 초창기에는 외화벌이 목적으로 많이 파견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이 북한의 통치자금과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미 국무부는 이번엔 수배한 IT 기술자들도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500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걸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핵 개발 자금이라든지 불법적인 자금으로 전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원천

봉쇄를 해서 북한이 경제 제재의 효과를 절감하고 협조 체계로 비핵화 요구를 낮추는 생태계가 없게 만들려는 게 미국의 목표다.

하지만 갈수록 기술력을 키우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암호화 해 등의 디지털 자금 탈취도 서슴지 않는다. 대북 제재로 부족해진 외화를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미 FBI가 수배 중인 북한인 심현섭 역시 북한 해커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북한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은 인물이자, 두바이에 19명 정도의 IT 업체에 종사자는 모두 북한 정찰총부 산하에 근무하던 해커들이다.

그중 북한 무역은행인 광산은행에 소속된 심현섭은 해킹을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중동과 중국에서 두 차례 세탁한 뒤 북한으로 보냈다. 북한은 최근 6년간 58건의 해킹을

통해 무려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은 상당한 타격을 준 바 있다. 2009년 발생한 7.7 디도스 공격으로 청와대와 국회, 미국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한미 주요 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됐다.

2013년엔 언론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동시다발적으로 마비시켰고, 2017년에는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 세계 150개국의 항공과 철도, 의료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북구 대가로 암호화해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천 기가 바이트가 넘는 법원 자료를 유출되기도 했다. 국내 방산업체들의 경우 북한의 대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김수키', '안더리얼'이 이례적으로 동시 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현재 우리의 사이버 안보체계는 공공과 민간부문별로 주권 부처가 나뉘어 있고 분권적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이버 대응 체계 개선에 공감해 사이버 안보법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개인정보 민간 감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 민간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사설

국정 지지도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어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은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이라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인기 영합주의나 이런 걸 일절 안 하고 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시적으로 채 상병 같은 사건과 거부권이 연 결돼 있기 때문에 야당의 정쟁이 일부 통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여러 문제에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응답률 10% 이하의 여론 조사는 설계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며 갤럽 조사의 신뢰도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어느 국민의힘 전 의

원은 "대통령 지지율 21%는 정권의 생명에 빨간 불이 켜진 최악의 상태"라며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법안 부결시키면서 3년을 버티고 나가면 된다고 믿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에서 왜 박살났는지 그 이유도 모르 채 '빠 빠 지게 뛰겠다'며 어퍼컷을 날리는 대통령, '한 몸으로 팔뚝 뚱치자'는 의원들 '108석도 굉장한 큰 숫자'라는 비대위원장, 이러니 국민들 열광만 지르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수층까지 찬성 비율이 높았던 채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은 거부했고, 여당은 재의결에서 부결시킨 걸 무슨 큰일 해낸 것처럼 자랑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심을 외면하고 혼란병 영결식 날 어퍼컷에 맥주 들고 환호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국정 지지도를 다시 한 번 냉정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여야 극한 대치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한참이 지났다. 그러나 여야의 대치는 풀릴 기미가 없다. 시작부터 파행이었던 4년 전 국회의 모습이 재연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본회의장 한쪽이 비워진 '반쪽 개원'에 이어 민주당의 원구성 강행과 이에 항의하는 본회의장 앞 시위까지, 파행 속에 문을 연 국회의 모습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두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맡아왔던 것이 그간 국회 운영의 관례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국회의 정상

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21대 당시 여당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원구성 완료까지 47일이 걸렸다. 22대에선 합의보다 신속한 원 구성이 민심이라는 야당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데 이어 나머지 7개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의회를 장악해서 자신들이 아픈 곳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여당의 법사위 운영위원장 요구를 '특검법 지연 전략'이라고 본다.

대치 전선 속에 협치에 대한 기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민주당도 다수의 힘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민생과 안보를 위한 협치가 절실한 때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4년이 역대 최악으로 불린 21대 국회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독자제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정확히 숙지하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 7,718건(잠정) 전년(1만 8,018건)보다 1.7% 감소하였지만, 사망자 수는 104명에서 120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가 우측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건너거나 보행자를 발견하게 되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법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올바른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 방법은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서행, 녹색일 경우에는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서 멈출 필요 없이 서행하면 된다.

또한 우회전 신호들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서 적색 신호일 경우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면 서행하여 통과해야 한다.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 상관

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여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않을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5 점이다.

경찰청에서는 '사거리 건널목'을 2~3m 떨어뜨리기로 하여, 우회전 시 우측 보행자 시야를 기존보다 더 확보할 수가 있게 하였고 사고가 많은 일부 지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올 연말 40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박보성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정면충돌로 뒤엉킨 칠레 열차들



지난 2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의 산 베르나르도에서 경찰과 소방관들이 열차 충돌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시철 운행 중이던 고속열차가 마주 오던 화물열차와 정면충돌해 최소 2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함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